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평가와 전망

최수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10

1. 배경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가 4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김정은이 참석하였고, 회의는 대의원 및 각 기관, 단체의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을 추모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용에 대하여> 채택,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국가예산, △조직문제 등 8개 의안을 결정하였다. 조직문제를 제외한 7개 의안들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 상정된 의안들은 크게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북한의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관련, 경제사업 및 예결산 관련, 그리고 조직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조직문제 관련 의안은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를 서둘러 개최한 배경에는 북한의 새로운

정책노선인 경제·핵무기건설 병진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과 평가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법적으로 우상화하기 위해 사회주의헌법 일부내용을 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북한이 핵보유국임과 인공위성의 제작 발사국임을 법령의 채택을 통해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셋째,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년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보잘 것 없고 의례적으로 다루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내각에 개혁인사를 등용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 김일성·김정일 법적 우상화

최고인민회의는 김영남대위원의 사회주의헌법 일부내용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필두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을 새롭게 보충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민족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규정하였다. 김일성·김정일의 법적인 우상화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천명

이어 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결정 등 3개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들 의안들은 모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안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대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령에서 ‘북한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10개항을 결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는 정당한 방위수단이며, △북한 핵무력은 북한에 대한 침략 및 공격에 대한 억제·격퇴와 침략의 본거지에 대한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하고,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핵무기는 적대적인 핵보유국이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하는 경우 북한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전반적인 핵무기 관련 안정성 보장을 준수하고, 핵무기나 핵무기 기술 또는 무기급 핵물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이 ‘당당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임을 강조하였다.

□ 경제사업 및 예결산 보고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은 최영림대의원(당시 내각총리)이 보고하였다. 보고에서 북한은 2012년 내각의 각종 사업들이 완수되었음을 자랑하고 있으나 특별히 새로운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일부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났음을 강조하고 있고, 금수산태양궁전 등 기념비적 대형건축물이 조성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희천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대상들의 완성 및 주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진과 현대화가 진행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실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들에서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광명성-3>호 2호기의 제작·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특별하게 다루었다.

2013년 과업에서 북한은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다지며 농업과 경공업에 총집중해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탄증산, 주체철생산기지 완비, 제철·제강소 현대화, 원료·연료보장대책 구비, 강재수요 보장(압연재생산 3.5배 이상 증산), 철도수송 강화, 알곡생산계획 완수, 초지조성 완수, 원료의 국산화 비중 증대, 수출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향상에 필요자금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첨단기술제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수출품의 종류를 늘리고 질을 높일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고 합병·합작을 통해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최광진대의원(재정상)이 보고하였다. 2012년 국가예산수입은 101.3% 수행(2011년 대비 10.1% 증가)되었고, 지방예산수입은 113.8% 수행되었다. 국가예산지출은 99.6%가 집행(2011년 대비 9.7% 증가)되었다. 2012년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44.8%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38.9%는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시책부문에 쓰였다. 국방비로는 국가예산의 일부만이 지출되었다고 밝혔으나 16.3% 정도 사용된 것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2013년 국가예산수입은 2012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거래수입금 3.5%, 국가기업이익금 6.0%, 협동단체이익금 5.3%, 감가상각금 2.8%, 부동산사용료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중앙예산수입은 83%, 지방예산수입은 1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2013년 국가예산지출도 2012년 대비 5.9% 증액 편성하였다. 이 중 4대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 7.2%, 농업과 경공업부문 5.1%, 기본투자(기본건설, 대보수 등) 5.8%, 과학기술부문 6.7%, 교육부문 6.8%, 보건부문 5.4%, 사회보험·사회보장부문 3.7%, 체육부문 6.1%, 문화부문 2.2% 각각 증액 편성토록 하였다. 국방비는 증액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지출총액의 일부만 사용한다고 하였다.

□ 조직문제: 내각에 개혁인사 등용

최고인민회의의 마지막 의안인 조직문제에 대한 토의 결과 일부 대의원들의 소환과 선출이 있었다. 최영림대 의원은 내각총리에서 소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박봉주 대 의원이 내각총리로 선출되었다. 김정각대 의원과 리명수대 의원은 직무변동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었고, 김격식대 의원과 최부일대 의원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태형철대 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에서 소환되었고, 홍선옥대 의원을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내각 성원에 대한 해임과 임명이 진행되어 박봉주 라인의 개혁세력이 농업상 등으로 입각(구체적 명단 미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전망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중 주목할 것은 강경과 온건으로 구분되는 핵무기건설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을 수행해 왔고, 이의 변형인 선군노선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들 노선은 결국 경제보다는 국방에 우선을 두는 정책노선으로 경제건설에서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이번에도 핵무기 개발 등에 우선하면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대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 북한이 내각에 개혁인사를 일부 등용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나 경제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휘를 전제로 군(軍)이 운영하는 외화벌이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한 조치에 대해 군부가 반발한 적이 있다. 또한 ‘6.28방침’으로 알려진 경제개선조치의 시행도 불발로 끝나고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인사들의 새로운 경제실험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비록 일부 개혁인사들이 입각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강경 분위기 하에서 이들이 경제부문의 변화를 추동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